



보 도 자 료

1995. 10. 11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내용 : 노태우 망언 규탄에 관한 건

학살자 노태우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5일, 노태우가 내뱉은 뻔뻔스러운 망언때문에 온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5.18 양민학살의 주범이 사람 몇명 죽인 것 가지고 왜들 야단이나는 식의 발언을 함부로 해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서 비애감마저 느껴진다.

우리는 이같은 망언에 접하며 잘못된 역사의 청산 없이는 불의가 정의를 우롱하고, 양민을 학살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 운위되며, 학살자를 국가의 원로로 모셔야하는 역사의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법정에 세워져 낱알이 죄상을 밝혀내고 처벌받아야 할 학살주범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현정부와 집권당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을 성토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대학교수, 교사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무수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5.18 학살주범의 단죄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민자당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만을 부어주고 있을뿐 일말의 해결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정부와 집권민자당은 무책임한 버티기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미 국회에 상정중인 5.18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살자들의 죄상을 낱알이 밝혀내고 역사의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만이 이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와 개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 정부와 국회는 5.18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

-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살자를 단죄하자

